

트럼프, 대 이란 경고

“주어진 시간 얼마없어”

이란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 NS상 으뜸장 놓기'가 재개됐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 중인 이슬람혁명수비대를 상대로 조만간 무력 사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의 대 이란 경고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직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SNS트루스 소셜에 쓴 글에서 “이란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핵심은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에 전향적 입장 취하기 등) 행동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러지 않을 시 그들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스라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SNS 글 게시에 앞서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30분가량 통화했다. 이스라엘 정부 등이 밝힌 둘 간의 공식 통화내용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의 공유였다.

아울러 트럼프가 통화 직후 SNS에 경고성 언급을 쏟아 낸 만큼, 대 이란 작전에 대해 논의했을 개연성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 통화 후 경고 메시지 협상재개 등 이란 전향적 입장 촉구 “강력한 공습에 맞닥뜨리게 될 것”

또 이날 이스라엘 방송 채널12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엄포가 이어졌다. 트럼프는 “그들이 그 지점(협상안 또는 절충안 수용)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했던 어떤 수위보다 더 세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란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와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향후 수일 내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수정안 제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절충안 도출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이란이 내건 협상재개 조건은 크게 5

가지다.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 종식 ▲대 이란 제재 해제 ▲이란 동결자산 반환 ▲전쟁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주권 인정 등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항을 위한 선결 조건은 종전이 고, 농축우라늄 등의 핵 문제는 추후 별도의 정식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같은 이란의 요구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이란에 ▲전쟁배상금 지급 불가 ▲미국에 농축우라늄 400kg 분량 인도 ▲핵 시설 1개 운영 유지 ▲이란 해외 동결자산 25% 해제 불가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행위와 협상 연계 등 5개 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이슬람혁명수비대 계열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매체 약시오스는, 트럼프가 이달 19일 군사작전 감행 여부 논의를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 인보팀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보다 나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이전보다 강력한 공습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 워싱턴 D.C. 외곽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참모진과 만났다. 참석자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넷 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후조정 지속... 사측, 정상출근 안내

>> 1면 '가처분, 후경영권'서 계속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사진)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관한 가운데 노사는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7시까지 하고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임직원에게 가처분 결정 관련 입장문을 배포하고 “추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입장에 앞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통령 발언이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한편,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이들을 남긴 만큼 19일 협상 결과가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지를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가상자산 거래량 급감... 거래소 실적 쇼크

중동사태 장기화... 시장 거래 위축
파생상품 취급 등 제도개선 시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해왔다. 거래소의 매출 다양화를 위해 법인 및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국제 표준에 알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은 695억원이다. 전년 동기의 3205억원과 비교해 78% 급감했다. 점유율 2위 빗썸은 작년 1분기에는 3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도 분기 적자를 지속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매출이 크게 후퇴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익도 급감해서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된 가상자산 거래액의 총합은 약 600억 달러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의 일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약 15~50%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은 더 빠르게 줄었다. 18일 기준 5개 원화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10월과 비교해 약 10%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는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만큼, 환경 변화에 민감한 개인투자자의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성향이 가파른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국내 거래소들은 매출의 95~99%를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 감소는 수익 하락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시장의 투심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의 거래량 감소가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기인해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시하는 것은 미 상원 표결을 앞둔 ‘클라리티법(CLARITY Act)’이다. 클라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 가상자산’과 ‘상품성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이중규제에 노출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규율을 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작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라리티법은 이달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의 최종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이 발의한 클라리티법이 최종 인준된다면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클라리티법은 은행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2

표를 얻는데 그쳤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단기간 내에 투심이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거래소의 매출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수수료만으로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요 거래소들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 및 외국인 거래 허용이나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국제 표준에 알맞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하반기 입법이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후에야 규제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규제 완화가 늦어질수록 거래소들의 영업 환경도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여야 간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 만큼,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분리된 규제 완화 논의가 조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AI 눈높이 맞춰야”... 식품업계, 생존 방정식 달라졌다

직접검색 감소... B2AI 전략 급부상

소비자가 마트 매대를 직접 보며 브랜드를 고르거나, 포털 창에 맛집을 검색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식품·외식업계의 마케팅 대상이 인간 소비자에서 ‘AI 알고리즘’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B2AI(Business to AI)’ 전략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생존 방정식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식품 기업들의 지상 과제는 대형마트의 ‘골든 존(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매대)’을 선점하거나, TV 광고 및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AI가 소비자의 구매를 대항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형적 마케팅의 위력은 감소하고 있다. AI 추천 영역에서는 패키지가 감성 카피보다 정형화된 데이터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영양 성분, 칼로리,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의 데이터를 AI가 가장 완벽하게 읽어갈 수 있는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의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넘어선 ‘AI 엔진 최적화(AIEO: AI Engine Optimization)’ 고도화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공식몰 ‘CJ

CJ제일제당은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자연어 검색 서비스 ‘파이’ /CJ제일제당

더마켓’을 통해 지난해부터 생성형 AI 기술 기반의 대화형 자연어 검색 서비스 ‘Fai(파이)’를 선보였다. 상품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기존 ‘목적형 구매’ 검색의 한계를 깨고 AI가 고객의 모호한 질문 속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골라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오늘 저녁 뭐 먹지?”라거나 “고단백이면서 저칼로리인 간편식은 없을까?”라고 물으면 AI가 수많은 제품의 영양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 함량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구매 후기와 검색 패턴 등 사용자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학습해 캠프,

홈피드 특정 상황(T.P.O)에 맞는 최적의 식품 조합을 역으로 큐레이션해 주기도 한다.

풀무원헬스케어 역시 헬스케어 플랫폼 ‘디자인밀’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토탈케어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의 단순 식단 구독 서비스를 넘어 AI가 고객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영양 진단부터 식단 추천, 섭취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통합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매일 아침 AI가 전날 섭취한 데이터를 분석해 부족하거나 과다한 영양소를 짚어주는 ‘데일리 영양 리포트’를 배달하며, 음식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메뉴를 말하기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식단을 기록하고 영양소를 분석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회사는 전문적인 영양 설계 노하우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제품 패키지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가 AI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 제품이 가장 먼저 매칭되도록 미세한 영양 성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태그(Tagging)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